

October  
2019수행과제명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VI) : 성 주류화 관련 법제 정비 방안  
과제책임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8 / E-mail: sympark@kwidmail.re.kr)

##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초록

- 성 주류화 관련 법제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한편 실효성 제고에 대한 요구도 받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함.

## 성 주류화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1. 배경 및 문제점

- ① 성 주류화 관련 법제는 그동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음.
  - ▶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관련 조항을 마련한 이후,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내용을 규정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정책범위 확장, 대상 수 확대, 절차의 구체화, 권한 부여, 성과 관리 등 발전 및 추진체계를 마련해 왔음.
- ② 성 주류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도 있음.
  - ▶ 관련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의 발전이 있었음에도 실제로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지 못함.
  - ▶ 성인지 예산 제도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비해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는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소관부처가 서로 다르게 분리 운영되어 제도의 효과성이 미약했음.
  - ▶ 추진체계가 짜임새 있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 제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함.
- ③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그동안 변화·발전되어 온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발전 과정과 성과를 살펴본 후에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2. 분석결과

### ①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표 1> 성 주류화 법제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

성인지 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기금 포함	2005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
2008년 「국가회계법」 개정	국가 세입세출결산에 성인지 결산 서 포함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적용 범위 확대,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명문 화

성인지 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2010년 「국가회계법」 개정	국가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성인지 기금결산서 포함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시행중인 법령’까지 확대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공표.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	지자체의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한 성 주류화 관련 규정 정비
2016년 「지방회계법」 제정	지자체의 결산서 부속서류로 성인지 결산서 포함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의무적 반영
201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지자체의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 조항 신설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 강화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 전부개정	성인지 예산제도 근거규정 마련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확대, 한류절차 명확화



## 성 주류화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

### ▶ 성인지 예산 운영 현황 및 성과

- 국가 수준의 성인지 예산서는 2010회계연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작성되었고, 시행 첫 해와 비교하면 국가 총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준임.

<표 2> 회계연도별 성인지 예산 작성규모 변화

(단위: 조 원, %)

회계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예산규모										
성인지 예산(A)	7.3	10.2	10.7	12.9	22.4	26.1	27.8	29.5	34.4	25.6
국가총예산(B)	202.8	309.6	326.1	342.5	357.7	376.0	386.7	400.7	429.0	400.4
구성비(A/B*100)	3.6	3.3	3.3	3.8	6.3	6.9	7.2	7.4	8.0	6.4

주: 1) 예산안 규모는 정부안 기준임.

2) '정부 총예산 대비'는 각 연도 정부 총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임. 정부 총 예산은 각 연도 '예산안 개요' (대한민국정부)를 참조함.

출처: 김효주 외(2017),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4쪽, 66쪽 재구성 및 2019 회계연도는 2019년 정부예산안을 참고하여 작성함.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서는 2012년도에 시범 작성·제출된 이후 2018년도까지 7차례에 걸쳐 작성·제출되었고, 2015년 소폭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8년도까지 대상 사업 수와 예산액 규모가 증가함.

<표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연도별 현황

(단위: 개, 억 원, %)

회계별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5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총계	11,803 (100.0)	125,990 (100.0)	13,229 (100.0)	147,342 (100.0)	12,805 (100.0)	144,650 (100.0)
회계별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7년도 성인지 예산서		2018년도 성인지 예산서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총계	13,865 (100.0)	153,359 (100.0)	15,353 (100.0)	163,928 (100.0)	16,700 (100.0)	202,906 (100.0)

출처: 박수범 외(2016), 「2016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5쪽; 정가원 외(2017a), 「2017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2쪽.

- 성인지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함께 성인지 결산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함.
- 반면, 성인지 예·결산 규모 확대의 내면에는 과다 측정의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는 성인지 예산의 극히 일부만이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사용된다는 점임. 따라서 성인지 예산과 결산, 그리고 다시 예산으로 환류되는 순환구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별 수혜분석 및 성과 목표 작성을 내실화하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의한 실질적인 예산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국회에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검토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성별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성과

-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후 대상과제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과 계획에까지 확대되면서 양적 성과의 확장이 두드러짐. 전반적으로 성별 균형 참여와 성별 통계 관련 개선안 위주로 도출되는 한계는 나타나지만, 각 분야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고, 각 분야의 성별 격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성과임.
- 중앙행정기관의 법령과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하위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및 성 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부처의 주요한 정책들은 개선되어 왔음.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조례,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특성을 살린 생활 밀착형의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한 개선이 이루어졌음. 시도 교육청의 법령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상대적으로 과제 수도 적고, 주로 성별 균형 참여 항목 중심의 개선으로 나타나지만, 성 평등에 교육 분야의 중요성이 지대한 만큼 성과를 과소평가하기는 어려움.
- 한편,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법령과 특정 정책 분야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의미가 있음. 주요한 사례로는 법령 및 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 정책, 공공기관 인사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방송심의 제도 등에 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들 수 있음. 지자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는 2016년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2017년부터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7건의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앞으로 이행 성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된 연차에 따라 주제·분야별로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반면, 반복적으로 유사 동일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이 선정되면서 분야와 지평을 넓히지 못한 문제가 지적됨. 이행 점진 및 정책 환류에 있어서도 한계를 보임. 법령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정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개정 조문만을 평가대상으로 하므로 타 법령, 상위 법령, 타 조항, 법률 시행령 규칙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음.
-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단기적인 성과나 개선 과제 건수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젠다를 선도하는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한계를 보임. 특히 법령·조례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상시 수행되는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방식에 그치지 않고, 젠더 관점으로 사후적 입법 평가의 성격을 가져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됨. 특히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예산과 연계되어 정책 환류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개선과제 도출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와 정책 환류로 이어지려면,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통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역시 예산에 반영되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가 조사를 통해 본 성 주류화 법제 성과 및 과제

- ▶ 성 주류화 법제에 대한 그간의 성과 한계,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도 추진의 참여자와 실제 제도 추진 주체를 중심으로 FGI를 실시함.
- 성 주류화 추진 주체는 중앙과 지방의 성별영향평가 기관 담당자, 업무(사업) 담당자, 성인지 예산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성인지 분석을 컨설팅으로 지원하는 전문가를 중앙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평가센터 소속 컨설턴트, 성인지 정책 연구자, 학계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함. FGI 대상자 규모는 약 50명이며, 1개 집단에 4~5명의 피면접자로 구성하여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추진함. 이 중 공무원은 4명으로 성별영향평가 기관 담당자로서 젠더 연구 및 여성학 전공자로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전담 인력임.

## ▶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표 4> 성 주류화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과제

성인지 예산 제도		성별영향평가 제도	
제도 운영 한계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지 예산 제도의 환류 및 활용 방안 마련</li> <li>성인지 예산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예산 확보</li> <li>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심의 기능 강화</li> <li>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통합 필요성</li> </ul>	전문가 (연구자,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성대상기관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li> <li>사업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지표의 현실화</li> <li>계획특정 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방법 및 절차의 현실화</li> <li>개선 과제 이행점검 관련 조항 강화</li> </ul>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석평가 지표 중 정책환경의 성별 분석을 점검리스트 형식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li> <li>담당공무원의 업무 성과와 연동되도록 정비</li> </ul>
추진 체계 한계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획재정부의 성인지 예산 운영에 대한 역할 및 기능 명시</li> <li>행정안전부의 지방 성인지 예산 운영에 대한 역할 및 기능 명시</li> <li>성인지 예산 담당부서의 역할과 기능 명시</li> <li>지역 성인지 예산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li> </ul>	전문가 (연구자, 컨설턴트),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정비</li> <li>분석책임관의 역할 및 책임 강화</li> <li>기관 및 사업 담당자 자격 정비</li> <li>민간부문 참여의 제도화 강화 필요성</li> </ul>

## ▶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및 개선 과제

<표 5> 성 주류화 법제의 성과, 문제점, 개선과제

구분	성과	문제점
전문가 (연구자,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적 근거 마련으로 인한 성 주류화 정책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li> <li>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 마련</li> <li>전 부처(부서) 사업 수행 및 업무 절차에 영향</li> <li>성 평등을 위한 성별 분리통계 기반 마련</li> <li>젠더 전문가 집단 형성 및 채용 수요 확대</li> <li>공무원의 성인지 의식 제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적 확산에 따른 질적 실효성 미흡</li> <li>성인지 예산 제도 관련 조항 미흡</li> <li>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분리 운영의 한계</li> <li>법적 구속력의 한계</li> <li>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미흡</li> </ul>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과제 수의 양적 증가와 공무원 성 평등 교육생 수 증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질적 성 평등에 대한 기여에 대한 의문</li> <li>업무 과부하 되는데 반해 사업 개선의 동기요인 부재</li> </ul>
구분	개선과제	
전문가 (연구자, 컨설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통합적 접근 필요</li> <li>성 주류화 제도 추진의 성과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li> <li>입법부(의회)의 역할에 대한 근거 마련</li> </ul>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관의 성 평등 담당관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 부여</li> </ul>	

## ▶ 소결

- 성 주류화 제도의 전반적 성과는 기반 구축,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따른 양적 확산이라는 점에 대부분이 동의하였음. 반면, 가장 개선이 시급하고 개선 요구가 높은 것은 성 평등에 대한 질적 효과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임. 특히,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 주류화의 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의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 더 나아가 성 주류화의 성과에 실효성 있게 기여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



- 또한 성인지 예산 제도는 현재 환류 및 활용 방안 제고를 위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특히 제도 추진의 책임 있는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에 기관 역할로서 성 평등 추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담당부서의 기능과 역할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 성과 및 목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3. 정책제언

성 주류화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 ④ 성인지 예산 제도의 법적 기반 강화 방안

##### ▶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 성인지 예산 제도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예산과 결산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즉 ‘성인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최적의 방식이라고 판단됨(관련 법률안 시안은 본 보고서 p239 참조).

##### ▶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

- 위와 같이 독립입법 추진 시 소요시간, 관계 부처 협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현행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성인지 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이 있음.
- 무엇보다 「국가재정법」에 예산안 편성 준비, 예산 편성, 결산 및 평가 각 단계별로 성인지 예산이 국가재정제도로서 체계성을 갖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편성 준비 단계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에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 방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추가하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서에 ‘부처 성 평등 목표와 연관성, 성 평등 관련 성과지표, 성과지표 선정 근거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결산 및 평가 단계에서는 성인지 예산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 평등 성과분석, 성 평등 개선계획’ 등을 포함시키고, 성과평가에서는 ‘각 중앙행정관서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주요 재정사업 평가 실시에 있어서 재정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 ④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 강화 방안

- ▶ 그동안 성인지 예산 제도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연계를 위하여 노력해왔고, 이는 크게 대상 사업의 연계와 작성 내용의 연계로 구분됨. 문제는 이러한 연계를 하려면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서가 작성 제출되어야 하는데 현실에는 그러지 않다는 점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을 못 찾아서 성인지 예산서도 작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 ▶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제출 시한과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법」에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3월 말까지 실시한다’(제7조)고 의무화함으로써 두 제도간의 연계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 성인지 예산 추진체계 확충 방안

### ▶ 성인지 예산 상설협의체 법적 기반 마련 관련

- 성별영향평가는 제도의 이행을 위해 관련 위원회 설치, 책임관과 실무담당자 지정,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법정화 하여 운영 중임. 하지만 성인지 예산의 경우,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관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예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권한과 기능 등을 부여할 수 있음. 이 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로서의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및 결산의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성인지 예산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함.
- 또 다른 방안으로는 기획재정부 훈령으로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하는 대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설협의체의 기능 강화와 운영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 기획재정부 직제 내 성인지 예산 업무 편제 관련

- 현재 성인지 예·결산의 운영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성인지 예·결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려면 성인지 예·결산의 관리·점검·평가·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서가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을 개정하여 예산실장 업무에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독립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 성인지 예·결산 지원 기관 법정화 관련

-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개선 및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전담지원기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정부의 성인지 예·결산에 대해 컨설팅 하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를 전담지원기관으로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뿐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出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국회 심의 기능 강화 관련

- 현재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결산 심의와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국회의 이해와 관심이 낮고, 의원 개인의 개별적 관심도에 따라 심의 내용이 좌우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년 단위 임기를 주기로 교체되는 상황에서 심의 결과를 환류하거나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를 해결하려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성인지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만들어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만 검토하도록 하고, 국회의 상시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국회예산결산위원회 내 성인지예산소위를 설치하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구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개선 방안

### ▶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발전과 수행 주체의 동기요인 제도화 관련

-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의미 없는 과제 수 양산, 반복적 사업 선정, 분석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정책환경의 성별 분석’ 지표의 어려움, 그리고 특정성별영향평가가 지방자치단체 단계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됨. 의미 없는 과제 수 양산과 반복적 사업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상과제 수를 늘리도록 되어 있는 현재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정성적 평가지표로 수정하여야 함.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지표 작성의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사업 분야별 젠더 이슈를 구체화하고 리스트화해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 현상이나 성별 특성 여부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분석서 작성에 대한 공무원의 어려움과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음. 이와 함께 성별영향평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이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 부담을 크게 안기는 데 반해 업무 수행 결과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실행 주체인 공무원이 이 제도를 잘 수행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하려면 사업 담당자에게 동기요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및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강화와 거버넌스 확대 관련

- 추진체계 관련해서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관련 조례에 의해 법정화 되어있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함. 또한 분석평가책임관의 전문성 및 역할 강화도 필요함. 분석평가책임관을 공무원 중심으로, 그것도 순환보직으로 임명하면 업무상, 시간상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려면 분석평가책임관의 젠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젠더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민간부문 참여의 제도화가 강화되어야 함. 성별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사업 개선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들의 모니터링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를 제도화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